

# 南·北韓 通貨統合 方式에 관한 研究: 事例分析을 中心으로<sup>(1)</sup>

文 聖 珉·文 宇 植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하여 남 북한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고 이들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남북한에 필요한 통화통합 관련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로 동·서독이나 유로존 사례에 국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홍콩·중국, CFA프랑존 등 다양한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남북한에서 정치통합이 경제·통화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선 정치통합)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후 정치통합)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였다. 이 때 사례 선별 기준으로는 통합 당시 경제상황의 유사성, 통합 이후 경제적 성과 등을 사용하였다.

선 정치통합 사례인 동·서독, 남·북베트남, 남·북예멘, 홍콩·중국 등을 분석한 결과 홍콩·중국 사례가 남북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콩·중국은 통합당시 경제력 격차가 남북한과 유사하며 경제통합 이후 경제적 성과도 동서독 등 여타 사례에 비해 양호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정치통합을 이루더라도 홍콩·중국 사례와 같이 1국 2통화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여 통화통합을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 사례가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정치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노동이동의 법적 제한, 자본이동의 선별적 허용, 상품교역에서 일정 정도의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통합 없이 이루어진 통화통합 사례로는 貨幣同盟(Currency Union)이나 換率同盟(Exchange Rate Union)이 있는데 이들 사례 중에서 프랑스와 CFA프랑존의 환율동맹 사례가 남북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랑스와 CFA프랑존은 경제력 격차가 남북한과 유사하며 경제적 성과도 양호하다. 경제성장은 다소 미흡하지만 물가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경우 체제전환 초기에 남북한이 프랑스와 CFA프랑존이 맺었던 환율동맹을 추진한다면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때 겪을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등의 거시경제 불안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1)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머리말

남·북한 통화통합 방안에 관한 기존 논문에서는 대부분 동·서독 통일이나 유로존의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하여 남북한이 선택해야 할 유용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동·서독 통일은 정치통합과 경제·통화통합을 동시에 이룬 경우로서 남·북한이 정치통합을 조기에 추진할 경우에 적용 또는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유로존의 통화통합은 정치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통합을 완성한 경우로서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및 통화통합을 이루려고 할 때 적용 또는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를 남북한 통화통합에 적용 또는 참고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동·서독 사례의 경우 정치·경제·통화통합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통일 이후 많은 부작용을 겪었던 경험을 근거로 볼 때 경제력 격차가 동서독보다 훨씬 더 큰 남북한<sup>(2)</sup>이 동·서독처럼 정치·경제·통화통합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유로존의 경우에는 통화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남북한이 유로존처럼 통화통합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남·북한 간 경제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조건을 가까운 시일 내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로존 사례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못해 남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할 때 남북한이 통화통합을 추진하면서 적용 또는 참고할 만한 사례로 동서독이나 유로존 사례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사례 이외의 다양한 통화통합 사례를 연구하여 남·북한 경제상황과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통화통합 방식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 시나리오를 남북한 정치통합이 경제·통화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통화통합 방식을 모색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 김정일의 후계구도 등으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화통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필요성이

(2) 1인당 GDP 기준으로 동서독은 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의 약 3배였으며 남북한은 2007년 현재 남한이 북한의 약 32배 수준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하여 남·북한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선별하고 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남북한에 필요한 통화통합 관련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남북한 통화통합과 관련해 기존 연구에서 찾으려 했던 질문과 이에 대한 성과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본 논문의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사례선별을 위해 통화통합 관련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여러 가지 통화통합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 중에서 남북한 통화통합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참고할만한 사례를 정치통합 시나리오별로 하나씩 선별하였다.

제4장에서는 선별된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정리하여 본 연구의 질문에 대한 해답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를 종합·정리하였다.

## 2. 通貨統合 關聯 既存 研究

### 2.1. 基本 概念

通貨統合(monetary integration)의 개념은 연구논문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보면 협의로는 화폐동맹(currency union)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환율동맹(exchange rate union)까지 포함<sup>(3)</sup>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화폐동맹(currency union)은 단일 통화 사용과 하나의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 및 외환정책 집행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환율동맹(exchange rate union)은 동맹 내 국가 통화 간의 환율을 고정시키고 이를 위해 각 중앙은행이 협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Cobham and Robson(1994), Masson and Pattillo(2005) 등에 따르면 환율동맹에는 공식(formal) 환율동맹과 비공식(informal) 환율동맹이 있는데<sup>(4)</sup> 공식 환율동맹과 비공식 환율동맹을 Cobham and Robson(1994)에서는 중앙은행간 공식 조정기구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Masson and Pattillo(2005)에서는 환율변동 허용 폭의 크기를 근거로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통합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좁은 의미에서 언급할 때에는 화폐동맹 또는 환율동맹

(3) Vaubel(1978)을 근거로 한 정의로서 Vaubel(1978, p. 1 and pp. 13-15)은 통화통합을 화폐통합과 환율통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4) Corden(1972)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진정한 환율동맹(a true exchange rate union)과 준 환율동맹(a pseudo-exchange rate union)으로 구분하였다.

을 구분해 명시하였다.

통화통합 이외에 통일이나 지역통합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통화통합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상으로는 정치통합과 경제통합을 들 수 있다.

政治統合은 이론<sup>(5)</sup>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국가와 같이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정치단위가 하나의 중앙조직을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박영호 외(2002) 등].

經濟統合은 재화 및 용역, 자본,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체로 6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6개 단계는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화동맹, 완전 경제통합 등을 말한다.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통화통합은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5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통합이 경제통합 단계에 비해 빠를 경우 통화통합에 따른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나 내생적 最適通貨地域(Optimum Currency Area; OCA) 이론에 따르면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정치·경제·통화 등 세 가지 통합대상 중에서 어떤 통합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이들 세 가지 중 하나가 먼저 이루어지거나 두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의 특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연구에 따라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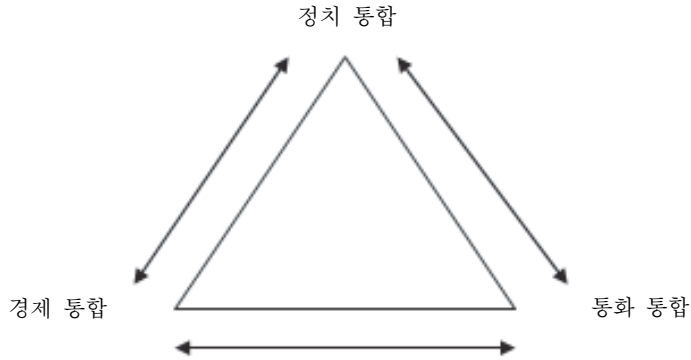
Issing(2001)은 이들 세 가지 통합 대상을 삼각관계로 표현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이 유럽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정치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통화통합을 완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1950년대 기능주의적 통합론 대두 이후에는 경제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마하트리히트 조약에 나타난 정신은 통화통합을 통해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동구유럽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은 경제통합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볼 수 있다.

정치통합과 통화통합의 관계에 대해 Eichengreen(1996)은 선후에 대한 원칙이 있다기 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두 통합이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서로 무관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5) 대표적인 통합이론으로는 다원주의 이론, 연방주의 이론, 기능주의 이론, 신기능주의 이론 등이 있다[박영호 외(2002) 등].



〈그림 1〉 政治·經濟·通貨 統合의 關係

결국 정치·경제·통화 통합 중에서 어떤 분야의 통합을 먼저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이 없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이들 통합의 우선 선후에 대한 논의보다는 특정 통합이 먼저 이루어졌을 경우 다른 분야의 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정치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2. 南北韓 通貨統合 關聯 研究

남·북한 통화통합과 관련한 기존 논의를 통화통합의 시기 및 속도, 통화통합의 구체적인 방안 등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구분 정리정리하였다.

### 2.2.1. 通貨統合의 時期 및 速度

통화통합의 시기 및 속도는 ‘早期·急進 ↔ 段階·漸進’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정치통합의 시기 및 속도와 함께 조합하면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시기 및 속도까지 감안하면 8가지 조합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경제통합 시기 및 속도는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정치통합과 통화통합의 시기 및 속도를 구분할 때 경제통합 단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단계·점진적인 정치통합과 통화통합은 각각 경제통합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섯 번째 단계(경제·통화 동맹)나 여섯 번째 단계(완전 경제통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급진적인 통합은 정치통합과 통화통합이 이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네 가지 경우를 간단히 정리하면 <表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치통합을 기준으로 보면 ‘조기·급진’인 case I·II와 ‘단계·점진’인 case III·IV로

〈表 1〉 通貨統合 方式 區分(時期 및 速度 基準)

		정치통합	
		조기·급진	단계·점진
통화통합	조기·급진	case I	case III
	단계·점진	경제 통합 단계	
		case II	case IV

구분되며, 통화통합을 기준으로 보면 ‘조기·급진’인 case I·III과 ‘단계·점진’인 case II·IV로 구분된다.<sup>(6)</sup>

case I과 case IV는 동서독과 유로존이 대표적인 사례로 남북한 통화통합 관련 사례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에 반해 case II나 case III에 대한 사례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case I 방식(동서독 사례 등)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동·서독이 정치·경제·통화통합을 동시에 추진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남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통화통합 방식으로 case I 방식을 지지하는 견해와 case II 방식을 지지하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sup>(7)</sup>

case I 방식을 지지하는 연구로는 하성근(1997)과 전홍택·이영섭(2002) 등이 있다. 전홍택·이영섭(2002)은 급진적 통일시 화폐 금융통합을 불과 2~3년 정도밖에 미룰 수 없어 case I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하성근(1997)은 가격자유화에 따른 물가 및 환율상승이 동서독에 비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에서 더 컸던 점을 근거로 통화통합을 조기에 추진하지 않는 case II 방식에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윤덕룡·정형곤·남영숙(2002)은 동독의 임금상승과 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등을 근거로 case II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case I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방식에서도 노동시장을 일정기간 분리시킨다면 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한편, case II(조기·급진 정치통합, 단계·점진 통화통합)에는 정치통합은 이루어졌으나 통화통합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홍콩·중국의 경우가 포함되며, 단계·점진 정치통합에 해당하는 case III과 case IV에는 통화통합은 통화동맹 및 환율동맹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정치통합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포함된다.

(7) case I 사례를 분석하면서 case IV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장원태(1997) 등은 남북한의 정치통합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case I을 분석한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case II 방식을 지지하는 Kwon(1997)과 장봉규(2001) 등은 case I 방식의 부작용은 통화통합을 case II 방식으로 해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won(1997)은 독일과 예멘의 통화통합 사례를 볼 때 case I 방식의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남·북한의 정치통일이 먼저 이루어지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1국 2통화체제를 유지하는 case II 방식이 통일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ase IV 방식(유럽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는 동 방식의 타당성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보다는 동 방식을 참고로 하여 남·북한이 동 방식으로 통화통합을 추진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방식에 의한 통화통합은 경제교류가 상당 수준 이상으로 진전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동 방식을 남북한에 적용하려는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동 방식에 의한 통화통합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전홍택·이영섭(2002), 이영선(2002), 이건범(2006) 등이 있다.<sup>(8)</sup>

한편, case III 방식을 주장한 연구로는 윤덕룡(1997)이 있다.<sup>(9)</sup>

이들 case III과 IV 방식은 우리 정부가 계승<sup>(10)</sup>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 모두에서 채택될 수 있는 통화통합 방식이기도 하다.<sup>(11)</sup>

### 2.2.2. 具體的인 通貨統合 方案

구체적인 통화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는 case I 이외의 방식에서 최종적인 통화통합 방식과 그 이전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case II 방식을 주장하는 장봉규(2001) 등과 case IV 방식을 주장하는 전홍택·이영섭(2002) 등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통화통합 방안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이들은 경제통합을 세 단계<sup>(12)</sup>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경제통합 2단계의 마지막 시기에 북한통화를 남한통화에 고정하는 환율제도를 도입하고 경제통합 3단계에서 완전한 통화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8) 이들이 주장하는 구체적 방안은 “2.2.2. 구체적인 통화통합 방안” 참조.

(9) 자세한 내용은 “2.2.2. 구체적인 통화협력 방안” 참조.

(10) 이는 남북한이 정치·경제통합을 (1) 남북화해·협력 단계, (2) 남북연합 단계, (3) 통일국가 완성 단계 등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겠다는 방안으로서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 정부는 1989년 9월에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1994년에 이를 재확인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계승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2008, p. 63)].

(11)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附表 1> 및 <附表 2> 참조.

(12)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의 초기단계, 경제통합과 통화협력을 강화하는 중간단계, 경제통합의 최종단계 등 세 단계이다.

case III 방식을 주장한 윤덕룡(1997)은 개혁 초기에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과 같은 심각한 거시경제 불안을 경험했던 동유럽 체제전환국 사례를 근거로 북한에 대해서도 개혁 초기에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원을 준비통화로 하는 通貨委員會制度(Currency Board System)<sup>(13)</sup>를 도입하고 남한이 준비통화 마련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2.2.3. 本 論文의 研究 方向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통화통합의 시기 및 속도’에 관한 연구 뿐 아니라 ‘구체적인 통화통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통합 시기 및 속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상반된 견해로 양분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이 경우 정치통합 시기 및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통합이 먼저 조기·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나중에 단계·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통화통합 시기 및 속도에 대한 해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통일된 한국이 ‘1통화’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2통화’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국 1통화’는 정치통합과 함께 통화통합을 조기·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1國 2通貨’는 정치통합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통화를 통합하지 않고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통화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통합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통합이 먼저 이루어져 1국 2통화를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 남북한이 통화통합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통화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3. 通貨統合 關聯 理論

통합과 관련한 연구는 정치, 경제, 통화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논문에서는 통화통합 관련 이론과 정치통합과 경제통합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3) 통화위원회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 3.2.절 3.2.2. 후 정치통합시 통화통합 사례” 참조.



### (通貨統合 關聯)

통화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자유로운 환율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데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낮은 거래비용, 환율 및 상대가격 변동의 불확실성 축소, 정책신뢰도 증진 등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最適通貨地域(Optimum Currency Area; OCA) 이론에서는 성공적인 통화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격의 대칭성[Mundell(1961)], 경제의 개방정도[McKinnon(1963)], 경제의 다양성[Kenen(1969)]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이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은 나라들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Mundell(1961), Alesina and Barro(2002), Rogers(2007)에서 재인용].

통화통합에 따른 비용은 회원국들이 외부충격에 의한 영향의 대칭성, 경제의 다양성, 국가간 요소이동의 정도, 임금 및 가격의 유연성, 인플레이션의 유사성 등이 클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De Grauwe(2005), Bayoumi and Eichengreen(1997), Zhao and Kim(2006)에서 재인용].

한편 경제력 수준이나 물가 수준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통화통합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ogers(2007) 등은 EU 국가들 간의 물가수준이 수렴해 가면서 물가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낮아진 반면 물가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Cukierman and Lippi(2001)는 통화통합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동질적인 국가의 통화통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통화통합 이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가 강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는 임금과 물가를 상승시키고 더 나아가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통화통합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 통화통합이 와해될 수도 있다. Nitsch(2004)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의 경우 통화동맹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 (政治統合과 經濟統合의 聯關性)

정치통합이 경제통합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정치가 보조금이나 시장 규제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lesina, Spolaore and Wacziarg(2000)는 무역관련 규제가 많았던 과거에는 정치통합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무역자유화가 진전된 최근에는 정치통합이 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며 따라서 경제성장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rou and Ruta(2007)는 정치통합을 통해 보조금 지급, 시장규제 등 경쟁

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논리로 정치통합 이후 통합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할 경우 정치통합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바로 동·서독 통일의 경우이다. Canova and Ravn(2000)은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재분배정책을 사용해서 技術水準이 낮은 勞働者(low-skilled agents)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와 생산이 줄고 이는 다시 기술수준이 높은 서독지역 재분배를 늘려야 하는 악순환의 경로에 들어가게 된다.

### 3. 南北韓에 適合한 事例 選別

#### 3.1. 事例 選別 方法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정치통합 방식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각 정치통합 시나리오에 적합한 통화통합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는 남북한의 통화통합은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정치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정치상황 변화는 어떤 경제변수들보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통합 시나리오는 ‘先 政治統合’과 ‘後 政治統合’으로 구분하였다. ‘先 정치통합’은 정치통합이 경제·통화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이며, ‘후 정치통합’은 정치통합이 경제·통화통합보다 나중에 이루어지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여러 사례들이 각기 다른 상황과 조건에서 통화통합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남북한 통화통합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몇 가지 경제지표로 통화통합 사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하여 선별 대상을 줄인 후 기준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전쟁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하였다.

(事例 選別 基準: 經濟的 類似性 및 經濟的 效果)

먼저, 통화통합 당시 경제상황이 남북한과 유사한 사례가 남북한에 통화통합에 적용 또는 참고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통계 부족 등으로 다양한 OCA 기준을 비교하기 어려우나 남북한의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북한이 OCA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견해는 거의 없다. 따라서 경제력 수준이나 대외개방도 등에서 차이가 큰 국가간에 이루어진 통화통합 사례가 남북한에 적합할

〈表 2〉 南北韓의 經濟力 隔差(2007年 基準)

	명목 GNI (억 달러)	1인당 GNI (달러)	무역총액 (억 달러)	무역/GDP (%)	인구 (만 명)
남한(A)	9,567.9	19,841	7,283.3	76.1	4,845.6
북한(B)	147.5	618	29.4	19.9	2,320.0
A/B(배)	64.9	32.1	247.7	3.8	2.1

資料: GNI 통계는 UN 통계국, 무역총액 및 인구는 한국은행.

것으로 판단된다.<sup>(14)</sup>

또한 통화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양호한 사례가 남북한 통화통합에 적용 또는 참고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경제력 수준이 낮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체제전환이나 통화통합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물가상승 등의 거시경제 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며 통화통합 과정에서도 물가상승, 실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치·경제통합 과정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재분배정책으로 정치통합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3.2. 通貨統合 事例 選別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선 정치통합시’와 ‘후 정치통합시’를 구분하여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였다.

#### 3.2.1. 先 政治統合時 通貨統合 事例

##### (1) 事例 紹介

정치통합을 이룬 후 통화통합을 추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동·서 독일, 남·북 예멘, 남·북 베트남, 홍콩·중국 등이 있다.

동서독은 정치통합(1990. 10. 3)과 통화통합(1990. 7. 1)을 거의 동시에 이룬 경우로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경우이다.

남북 예멘과 남북 베트남은 정치통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통화통합을 이룩하였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아 조기·급진적인 통화통합 사례로 볼 수 있다. 남북 예멘은 정치적 통일(1990. 5. 22)을 이룬 이후 남북예멘 통화(디나르, 리알)를 모두 사용하다가 1993년부터 동전부터 통합하기 시작하여 1996. 6. 11일 북예멘의 리알로 통화를 통합하였다. 남북 베트남도 전쟁을 통한 통일(1975. 4. 30)을 이룬 이후 1975. 9. 22일 남베트남 화폐를

(14) 물가수준 또는 인플레이션이 통화통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나 이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 물가관련 지표비교는 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남베트남 화폐로 교환하여 남북 베트남 통화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통화체제를 유지하다가 1978.5.3일 새로운 단일화폐로 통화를 통합하였다.

홍콩·중국<sup>(15)</sup> 사례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1997.7.1)된 이후 10년 이상 별도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경제·통화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통화통합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홍콩·중국 통화를 위안화로 통합하고 이를 발판으로 위안화를 아시아의 중심통화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事例 選別

남북 예멘과 남북 베트남 사례는 모두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룬 사례로 남북한 통화통합 과정에서 적용(또는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두 사례는 구체적인 사례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남북 예멘은 정치통합(1990.5.22) 이후 정치 군사적 권력을 1:1로 대등하게 배분하여 과도정부를 구성하였으나 기계적인 균등 권력배분에 따른 비효율성 등으로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어 결국 전쟁(1994.5.4~7.7)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겪었다. 이 사례는 기계적인 권력배분 방식의 합의 통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남북한에 적용하기 곤란하며 오히려 반면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이다. 남북 베트남은 오랜 전쟁(1959~1975)을 거쳐 통일된 국가로서 통일 이전의 경제상황을 비교할 만한 경제통계가 제대로 없으며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가 전쟁에 의한 영향이 클 수 있어 효과를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더욱이 통화 및 경제통합 정책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맞추어 이루어진 사례이기 때문에 남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

동서독과 홍콩·중국 사례의 경우 정치통합 당시 경제상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유사성 여부가 다소 혼재되어 있어 판단이 곤란하나 정치통합 이후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홍콩·중국 방식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통합 당시 경제상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보면 남북한에 적합한 방식의 선별이 곤란하다.<sup>(16)</sup> 경제력 격차(1인당 GDP 기준)는 홍콩·중국이 남북한과 비슷하나 GDP 총액

(15) 홍콩·중국 사례에 마카오·중국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음. 이는 두 사례가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1997.7.1 및 1999.12.20에 중국에 반환되어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6) 한편, 일부에서는 동서독의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가 통일을 주도하였으나 홍콩·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통일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홍콩·중국 사례는 남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으나 이는 경제체제가 다른 국가를 통합할 때 급진적인 체제전환과 통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체제전환 이후에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인가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적용(또는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3〉 政治統合 當時 經濟指標 比較

(단위: 배)

	정치통합 이전		한국(남/북) (2007년 현재)
	독일(서/동) (1989년 현재)	홍콩/중국 (1996년 현재)	
1인당 GDP	3.0	34.0	32.1
GDP 총액	9.7	0.17	64.9
무역 비중	1.4	7.5	3.8

資料: 동서독은 권구훈(1997) 등, 홍콩·중국과 남북한은 UN 및 IFS 통계 등.

〈表 4〉 統合 前後 經濟成長率 및 物價上昇率 比較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CPI)		
		통합 전 (5년)	통합 이후		통합 전 (5년)	통합 이후	
			1~5년	6~10년		1~5년	6~10년
동·서독 <sup>1)</sup> (1990년 통합)	서독	2.7	1.4	1.9	2.3	3.1	1.6
	동독	2.3	-0.5	1.8	2.1	10.3	1.5
홍콩·중국 <sup>1)</sup> (1997년 통합)	홍콩	4.9	1.4	6.4	8.5	-1.9	0.4
	중국	12.4	8.2	10.6	14.1	-0.5	2.6

註: 1)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하였음.

資料: 동서독은 Busch and Müller(2004) 등, 홍콩·중국은 UN 및 IFS 통계 등.

은 동서독이 더 비슷하다. 1인당 GDP 기준 경제력 격차는 남북한(32배)이 홍콩·중국(34배)과 비슷한 반면 동서독(3배)과는 다르다. GDP 총액 기준으로는 남북한(65배)이 홍콩·중국(0.2배)보다는 동서독(10배)과 더 유사하다.

정치통합 이후의 경제적 성과는 홍콩·중국이 동서독에 비해 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홍콩·중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통합 전과 대체로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물가상승률은 통합 이전에 비해 안정되었다. 이에 반해 동독과 서독은 경제통합 이후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한 후 다소 안정되었다.

실업률과 재정수지 측면에서도 홍콩·중국이 동서독에 비해 양호하다. 특히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2003년 20%를 넘었으며 독일경제 전체 실업률도 2005년에는 10.6%를 기록하였다.

〈表 5〉 統合 前後 失業率 및 財政收支 比較

		실업률			재정수지/GDP		
		통합 전 (5년)	통합 후		통합 전 (5년)	통합 후	
			1~5년	6~10년		1~5년	6~10년
동·서독 <sup>1)</sup> (1990년)	서독	8.8	9.3	11.8	-1.3	-2.8	-1.7
	동독	..	14.1	18.4			
홍콩·중국 <sup>1)</sup> (1997년)	홍콩	2.4	5.7	5.8	1.5	-2.3	2.1
	중국	2.7	3.4	4.3	..	..	..

註: 1) 연도별 실업률 및 재정수지를 산술평균하였음.

資料: 동서독 실업률은 독일연방통계청[안예홍·문성민(2007)에서 재인용], 홍콩·중국 실업률과 재정수지/GDP는 Econstat.

(選別 結果)

정치통합을 먼저 이룬 사례 중에서는 통화통합을 점진·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콩·중국 사례가 통일 당시 상황에서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경제적 성과에서는 통화통합을 조기·급진적으로 추진한 동서독 사례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홍콩·중국 방식으로 남북한의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홍콩과 중국이 50년 동안 다른 통화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주권반환 초기에 발표하였다.

동서독 사례는 Canova and Ravn(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정치통합으로 역효과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재정지출과 통일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남북한 통화통합 방식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이에 반해 홍콩·중국 사례는 정치통합 이후 경제와 통화를 분리함으로써 정부의 인위적인 소득 재분배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정부의 개입이 동서독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Nitsch(2004)의 연구를 감안하면 남북한의 경우 물가상승률 격차가 크며 체제전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통화통합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통화통합을 가능한 한 늦게 하는 홍콩·중국 사례가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제4장에서 남북한 통화통합 방안으로 적용 또는 참고할 수 있는 홍콩·중국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3.2.2. 後 政治統合時 通貨統合 事例

#### (1) 事例 紹介

정치통합 없이 통화통합을 추진한 사례는 화폐동맹(currency union) 사례와 환율동맹(exchange rate union)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貨幣同盟’에는 유로존(Euro Zone), CFA프랑존(Communauté Financière Africaine Franc Zone),<sup>(17)</sup> 동카리브 화폐동맹(Eastern Caribbean Currency Union; ECCU) 등과 같이 여러 나라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sup>(18)</sup>

유로존은 유럽연합(EU) 11개국이 참여하는 유럽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EMU)으로서 1999년 1월 출범하였다.

CFA프랑존은 1945년 12월 만들어져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통화동맹으로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사하라 이남<sup>(19)</sup>의 15개 아프리카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1945년부터 1958년까지는 CFA가 아프리카 프랑스 식민지(Colonies françaises d’Afrique, French colonies of Africa)를 의미하였으나 이들 국가들이 프랑스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부터는 아프리카 프랑스 공동체(Communauté française d’Afrique, French community of Africa)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이들 통화는 프랑스 프랑(현재는 유로)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換率同盟으로 볼 수 있다.

동카리브 화폐동맹(Eastern Caribbean Currency Union; ECCU)은 카리브해 동쪽 6개의 섬나라와 2개의 영국령이 참여하는 화폐동맹이다. 이들 통화(Eastern Caribbean dollar)는 1950~76년에는 영국 파운드화에 페그(4.80 EC\$=1 £)했으며 1976년 이후에는 미달러화에 페그(4.80 EC\$=1 £)하고 있다. 이들 인구는 모두 합해도 50만 명 정도에 불과하며 1인당 GDP는 약 4,500달러에 불과하다.

‘換率同盟’에는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프랑스와 CFA프랑존 등의 사례가 있다.

유럽通貨制度(European Monetary System; EMS)는 병행통화방식의 유럽 통화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유럽 8개국이 합의한 통화 및 환율 제도로서 1979년 3월 설립되어 EMU

(17)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통화통합 사례 분석의 <表 10> 참조.

(18) 이들 이외에도 화폐동맹으로 분류되는 사례에는 CFP프랑을 사용하는 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왈리스와 푸투나뉴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프랑스 자치령으로서 독립국가간의 통화동맹과는 차이가 있으며 총 인구도 각각 259,596명, 244,410명, 13,484명에 불과하다.

(1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는 통상적으로 북부 아랍 5개국(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을 제외한 나머지 48개 국가를 가리킨다(참고로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민족)국가는 현재 총 53개임).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발족 직전(1998년)까지 운영되었다.<sup>(20)</sup> 이 제도의 핵심요소는 유럽공동통화(European Currency Unit; ECU), 환율조정메커니즘(Exchange Rate Mechanism; ERM), 신용공여장치(Credit Facilities) 등 세 가지이다.

프랑스와 CFA프랑존의 환율동맹은 CFA프랑존이 만들어진 194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CFA프랑존의 공동통화를 프랑스 프랑(현재는 유로)에 고정하고 고정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 재무부가 이들 두 통화의 전환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프랑스 재무부가 CFA프랑존의 통화정책에 일정 정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와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등도 통화통합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Masson and Pattillo(2005, pp. 4-5)).

通貨委員會制度(Currency Board System)는 자국통화의 발행권한을 특정국가통화의 유입 유출에 맞추고 환율을 동 통화에 고정시키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도이다. 동 환율제도를 채택한 나라로는 Hong Kong SAR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Bosnia, Herzegovina, Brunei Darussalam, Bulgaria, Djibouti, Estonia, Lithuania 등이 있으며 기준이 되는 통화로는 美 달러 뿐 아니라 유로화, 영국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등 다양하다.

달러라이제이션은 외국통화(미국 달러화 등)를 자국통화 대신 또는 자국통화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달러라이제이션 국가들은 남미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구 백만 미만의 섬나라들에 불과하다.

## (2) 事例 選別

화폐동맹(currency union)은 대부분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거나 경제통합과 함께 이루어졌다.<sup>(21)</sup> 따라서 동 사례들은 남북한이 경제통합이 상당 수준 이상이 된 이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는 경제력 격차가 크고 OCA 기준과의 차이가 클 것이 확실시 되는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사례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반해 환율동맹 사례인 유럽통화제도(EMS)나 프랑스-CFA프랑존은 화폐동맹보다 낮은 단계의 통화통합 형태로서 남북한 통화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 EMS가 EMU로 전환되면서 ERM도 ERM II로 전환되었으나 ERM II는 환율변동 허용폭( $\pm 15\%$ )이 크고 고정환율 유지를 위한 협력이 적다는 측면에서 환율동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1) 따라서 이들 화폐동맹을 경제·통화동맹으로 부르기도 함. 경제통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화폐동맹으로는 1800년대 라틴 통화동맹 등이 있다(Wikipedia).



〈表 6〉 프랑스와 CFA프랑존의 經濟力 隔差 比較(1人當 GDP 基準)(2007年 現在)

(단위: 달러, 배)

1인당 GDP		경제력 격차 (A/B, 배)	경제력 격차 한국(남/북, 배)
프랑스(A)	CFA프랑존(B)		
21,807	217~938	23.2~100.5	32.1

註: CFA프랑존 국가의 1인당 GDP는 인구 5백만 이상 국가만 대상으로 하였음.

資料: UN 통계 (<http://unstats.un.org>).

〈表 7〉 EMS 參與 國家間 經濟力 隔差 比較(1人當 GDP 基準)(1979年 現在)

(단위: 달러, 배)

경제력 상위국(A)		경제력 하위국(B)		경제력 격차(A/B)	비고 (남북 격차)
룩셈부르크	덴마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15,034 (108,217)	13,515 (57,257)	6,736 (35,585)	5,290 (59,540)	2.0~2.8	32.1

註: 1) 경제력 상위 및 하위 국가는 1979년 1인당 GDP 기준으로 구분.

2) ( ) 내는 2007년 현재 1인당 GDP.

資料: UN 통계 (<http://unstats.un.org>).

특히 프랑스와 CFA프랑존 간에 형성된 환율동맹은 경제력 수준이 높은 프랑스가 경제력 수준이 낮은 CFA프랑존의 통화가치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의 경제력 격차도 남북한만큼이나 큰 점 등을 볼 때 남북한이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중간 과정에서 적용 또는 참고해 볼만한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通貨制度(EMS)는 유럽이 병행통화방식의 통화통합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서 이들 국가들은 경제력 수준도 유사할 뿐 아니라 경제통합도 상당 수준까지 이루어져 있었다. 제도의 특징을 보면 이 제도는 각 국가가 자국통화의 환율을 병행통화에 고정시키고 각국의 환율이 고정환율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 국가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개입 등을 통해 협력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경제력이 극히 취약하여 이와 같은 환율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 사례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하여 남북한의 경제통합 수준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높아졌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들 환율동맹 사례의 경제적 효과는 자료부족, 통합 이후 경제적 여건의 차이 등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다. 유럽통화제도(EMS)는 출범(1979년) 이후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적인 경기침체로 이들 지역 국가의 경제성장이 큰 폭으로 둔화되어 통화통합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프랑스-CFA프랑존 역시 출범(1945년) 당시 이들 지역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통화통합의 효과를 평가하기 곤란하다.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나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은 국가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한 나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환율을 다른 나라 통화에 고정시키거나 자국 통화를 다른 나라 통화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북한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환율제도의 하나일 뿐 남북한 통화통합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sup>(22)</sup>

#### (選別 結果)

남북한이 정치통합 없이 통화통합을 추진할 경우 어떤 사례를 적용 또는 참고할 것인가는 남북한이 어떤 상황에서 통화통합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력 격차가 큰 국가간에 환율통합을 이룬 프랑스와 CFA프랑존 사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한 이후에 통화통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유럽통화제도(EMS) 형태의 환율동맹을 거쳐 유로존과 같은 화폐동맹을 이루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이후의 통화통합 방안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후 일정 수준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서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조만간 도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유럽통화제도(EMS)나 다양한 화폐통합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제4장에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통화통합 방안으로 참고할 수 있는 프랑스와 CFA프랑존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4. 南北韓에 適合한 事例 및 示唆點

남북한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는 홍콩·중국, 프랑스·CFA프랑존 사례를 소개하고 이 들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제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2) 윤덕룡(1997)이 제안한 방식과 동일한 통화위원회제도도 현재까지 사례가 없어 사례분석이 불가능하다.

#### 4.1. 홍콩의 中國 返還

##### (政治·經濟·通貨統合 過程)

1997년 7월 1일,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 받은 후 ‘一國兩制(One Country, Two Systems)’ 라는 통일원칙에 따라 홍콩을 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로 지정하였다.

홍콩으로부터 외교 및 국방에 관한 통치권을 인수하는 대신 나머지 분야에서는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였다. 홍콩특별행정구(HKSAR)에 적용되는 자치의 정도는 중국정부의 ‘地方 分權化’ 정책에서 보장되는 자치의 정도를 훨씬 초과한다. 50년 동안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였다. 동 기간 동안 자율적인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독자 화폐 사용, 조세권을 제외한 세무 행정, 별도의 관세 유지, 비 국가단위의 국제기구 참여 및 협정 체결 등도 보장하였다. 또한 홍콩이 국제 자유무역항 및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기존 기능을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자본 이동의 자유, 무관세 원칙 등을 유지하였다. 다만 중국 본토와는 자본 및 노동의 이동을 제한하고 관세도 부과하였다.

2003년 6월 29일, 중국과 홍콩은 경제동반자협정(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 按配,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을 체결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홍콩과 중국 본토와의 물류 및 서비스 투자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장영석(2007, p. 54)]. 수출금액이 비교적 많은 273개 상품에 대해 ‘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2006년 1월 1일까지 모든 상품에 대해 ‘영’의 관세율 적용하였다.

2003년 7월에는 중국 본토인의 홍콩 여행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2006년 6월 27일, ‘경제동반자협정 보충협약의 3’을 체결하여 법률, 전시회, 정보기술, 건축, 여행, 운수, 개인공상호 등 15개의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부문에 대한 자본 및 노동 이동을 자유화하였다.

향후 중국은 2020년까지 홍콩과 중국의 선전을 중심으로 한 주장 삼각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한다는 계획하에 구체적인 경제통합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3)</sup>

홍콩과 중국의 통화통합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

(23)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2008. 12. 29)에 따르면 홍콩, 선전을 비롯한 중국 남부 광둥성의 주장 삼각주 도시들, 마카오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주장 삼각주 대통합’ 계획을 구체화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보도하는 등 홍콩과 선전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경제통합 계획이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중국내 일부지역과 인근 국가의 무역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sup>(24)</sup>하였다.

(統合 政策에 대한 評價)

중국과 홍콩 경제는 모두 정치통합 이후에도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치통합 이후 경제 및 통화통합을 빨리 추진하지 않고 일정 정도 분리하는 정책이 중국과 홍콩 모두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Martin(2007)은 현재까지 중국과 홍콩이 경제적으로 일정 정도 분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관계가 홍콩 및 중국에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결과적으로는 홍콩과 중국이 경제통합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경제는 1997~2003년까지는 아시아 외환위기 등으로 다소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는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까지의 경기침체는 아시아 금융위기(1997년), IT 버블 붕괴(2000년)와 이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2001년), SARS(2001년) 등에 따른 것으로 통화통합에 따른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 요인들이 없어지고 2003년 7월의 중국 본토인의 홍콩 여행자유화 조치, 2004년 1월 시행된 經濟同伴者協定(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등으로 홍콩 경제는 물가 안정과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4%(2007년 현재)까지 낮아졌다.

(政策的 示唆點)

남북한이 정치통합을 이룰 경우 ‘1國 2通貨 體制’를 유지하면서 통화통합을 段階·漸進的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表 8〉 홍콩의 主要 經濟指標

(단위: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경제성장률(GDP)	5.1	-6.0	2.6	8.0	0.5	1.8	3.0	8.5	7.1	7.0	6.4
물가상승률(CPI)	5.8	2.8	-4.0	-3.8	-1.6	-3.0	-2.6	-0.4	1.0	2.0	2.0
실업률	2.2	4.7	6.2	4.9	5.1	7.3	7.9	6.8	5.6	4.8	4.0

資料: 홍콩 정부 통계처(www.censtatd.gov.hk).

(24) 동 조치는 중국의 주장 및 장강 삼각주 공업지역과 홍콩 및 마카오, 중국의 광서 장족 자치구 및 운남성과 아세안 10개국에 적용된다.

경제통합도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노동이동의 법적 제한, 자본이동의 선별적 허용, 상품교역에서도 일정 정도의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이동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경제적 유인으로만 제한할 경우 적정임금수준 유지와 과도한 노동력 이동 억제라는 두 정책의 相衡關係(trade-off)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이동을 선별적으로 허용하여 남한자본의 북한자본 장악을 억제하고 관세부과를 통해 북한지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홍콩과 중국은 각자 독자적으로 경제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통화 협력이 불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북한의 경우 경제적 역량이 부족하여 독자적인 경제안정화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통화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2. CFA<sup>(25)</sup>프랑존

##### (CFA프랑존 概要)

CFA프랑존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사하라 이남의 14개 아프리카 국가의 화폐동맹이다. CFA프랑존은 서부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WEAMU)과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CAEMC)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 동맹별로 하나의 통화(CFA Franc)<sup>(26)</sup>를 사용하며 하나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들 통화를 프랑스 프랑화(유로화 출범 이후는 유로화)에 고정하고 프랑스는 CFA프랑존의 고정환율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CFA프랑존은 회원국들 간에는 화폐동맹이지만 프랑스와의 관계를 보면 환율동맹이다.

CFA프랑존은 공식으로 프랑스가 브레튼우즈 협정을 비준하고 1 CFA프랑 = 1.7 프랑스 프랑(구 프랑화)의 환율을 발표함으로써 출범(1945. 12. 26)<sup>(27)</sup>하였다. 출범 이후 1948년과 1994년에 각각 평가절하 실시하였다.

(25) CFA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1950년대 말 60년대 초까지는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the French Colonies of Africa)라는 의미였으나 이들 국가들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부터는 아프리카의 프랑스 공동체(the French Community of Africa)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6) CFA 프랑은 실제 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의 프랑화(ISO code XOF)와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의 프랑화(ISO code는 XAF)라는 두 개의 다른 통화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이는 이들 두 통화가 프랑스 프랑화(현재는 유로화)와 동일한 환율로 고정되어 있어 통칭 CFA 프랑화로 불린다.

(27)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프랑스와 식민지 통화간 통화의 태환성이 보장되었고 더 나아가 동 통화지역 내에서는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미 존재했던 통화동맹이다.

〈表 9〉 CFA 프랑(CFAF)의 프랑스 프랑 및 유로 對比 換率

환율	일시	비고
1CFAF = 1.70 Franch franc	1945. 12. 26.	CFA 프랑 출범
1CFAF = 2.00 Franch franc	1948. 10. 17.	프랑스 프랑의 대미 달러환율 평가절하
1CFAF = 0.02 Franch franc	1960. 1. 1.	프랑스 프랑의 재평가
1CFAF = 0.01 Franch franc	1994. 1. 12.	CFA 프랑의 평가절하
100CFAF = 0.152449 euro	1999. 1. 1.	프랑스 프랑을 유로화로 대체(유로 출범)

〈表 10〉 CFA프랑존의 制度的 틀

	West African	Central African
명칭	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 (UEMOA)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CEMAC)
참가국가	Benin, Burkina Faso, Mali, Niger, Togo, Côte d'Ivoire, Guinea-Bissau, Senegal <8개국>	Equatorial Guinea, Cameroon, Congo,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Gabon <6개국>
최고 의사결정 기구	정상회의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각료위원회 (Monetary Committee)
	UEMOA위원회 (National Credit Committees)	집행부
중앙은행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CEAO)	중앙아프리카 은행(BEAC)
금융감독	은행위원회	중앙아프리카 은행위원회

(프랑존의 組織과 制度)

각 중앙은행 이사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와 프랑스 측 이사로 구성된다. BCEAO 이사회는 18명의 국별 이사(국별 2명)와 프랑스 측 이사 2명으로 구성되며 BEAC 이사회는 중임 가능한 3년 임기의 13명 이사와 프랑스 측 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作動 原理)

이들 통화동맹은 네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프랑스와 각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tasavage(2003, p. 81)]. 환율 고정, 프랑스 재무성의 태환성 보장, 통화의 자유로운 역내이동, 외환보유액 집중 등이다.

유로 출범 이후에는 유로화에 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유로화와 CFA 프랑의 자

유로운 태환은 프랑스가 보장하고 있다.

외화준비금의 집중화는 우선 두 통화동맹의 중앙은행을 통한 역내 각국의 외환준비금 집중과 프랑스 재무성에 두 중앙은행의 준비금 예치라는 이중의 집중화가 이루어진다. 두 개의 지역 중앙은행이 프랑스 재무성에 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중은 설립초기에는 100%였으나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CEAO)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50%, 중앙아프리카 은행(BEAC)의 경우 2007년부터 60%로 감축되었다.

프랑존이 위의 네 가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外貨運營計定'(operation account)을 활용하고 있다. 외화운영계정은 CFA프랑존의 각 중앙은행(BCEAO 및 BEAC)의 이름으로 프랑스 재무성과 아프리카지역 중앙은행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프랑스 재무성에 개설된 당좌구좌이다. 동 계정에서 CFA프랑존 중앙은행은 무제한 당좌대월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동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좌대월이나 대정부 신용공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CFA프랑존의 각 중앙은행은 단기부채의 20% 이상을 외화준비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3개월 연속 동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중앙은행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EAO는 각 회원국들은 정부기관이 보유한 외화를 외화운영계정에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EAC는 프랑스 재무성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규모를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지역 중앙은행은 회원국 정부에 재정수입(BEAC)이나 조세수입(BCEAO)의 20% 이상을 신용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 외에도 CFA프랑존 중앙은행은 다양한 공식 비공식 모임을 통해 프랑스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FA프랑존의 通貨協力 評價)

CFA프랑존은 물가안정에는 도움을 주지만 경제성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가는 CFA프랑존 국가들이 여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表 11〉 CFA프랑존의 消費者物價 上昇率 推移

(단위: %)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WAEMU	3.5	3.8	3.6	0.2	1.8	4.1	2.9	1.3	0.5	4.3	2.3	2.4
CAEMC	4.4	6.0	2.4	0.5	1.3	4.4	3.0	1.3	0.6	2.9	5.2	1.6
Sub-Saharan Africa	36.4	17.6	10.7	14.4	16.8	15.2	12.2	11.2	7.6	9.0	7.3	7.2

資料: Banque de France(www.banque-france.fr).

〈表 12〉 CFA프랑존의 經濟成長率 推移

(단위: %)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WAEMU	6.0	5.6	5.6	3.3	0.2	3.9	1.5	2.9	2.8	4.1	3.1	3.0
CAEMC	4.5	5.2	4.9	-0.3	3.3	6.2	4.0	4.2	6.6	3.7	3.1	4.0
Sub-Saharan Africa	5.2	3.5	2.6	2.8	3.5	3.9	3.5	4.0	6.8	6.2	6.4	7.2

資料: Banque de France(www.banque-france.fr).

경제성장률은 CFA프랑존 국가들이 사하라 이남의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다소 낮아졌다.

그 원인에 대해 Ramirez and Tsangarides(2007)는 낮은 경쟁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쟁력 저하의 원인은 1994년의 평가절하 이후 지속된 통화가치 상승, 인적·물적 자본 개선을 위한 정책 부재 등이라고 분석하였다. Zhao and Kim(2006)은 CFA프랑존 국가들이 OC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화폐동맹 유지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프랑스 프랑화(현재는 유로화)와의 무한 태환성 보장에도 불구하고 CFA프랑존의 각 중앙은행은 각자의 경제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이자율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Veyrune(2007)은 CFA프랑존이 통화위원회제도에 비해 통화정책을 더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는 프랑스의 도움과 자본이동 제한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CFA프랑존과 같은 방식의 환율동맹이 통화위원회제도 등에 비해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프랑스는 CFA프랑존과의 환율동맹 유지를 위해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외환운영계정이 대체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다.

〈表 13〉 外換運營計定 運營 結果 要約(1956~2005年)

	외화운영계정이 본원통화의 20% 미만으로 나타난 달수(개월)	외환준비금이 본원통화의 20% 미만으로 나타난 달수(개월)
BCEAO	105(17.6%)	36(6%)
BEAC	161(27.4%)	116(16%)

資料: Veyrune(2007, p. 7).



## (政策的 示唆點)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하여 남북한이 경제공동체 구성을 추진할 경우 프랑스-CFA프랑존과 같은 환율동맹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체제전환 초기에 북한이 북한통화의 환율을 남한통화에 고정시키고 남한은 북한통화의 轉換性(convertibility)을 보장할 경우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등의 거시경제 불안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CFA프랑존은 프랑스로부터 통화안정 이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남북한의 경우 남한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도움을 주는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에 도움을 준다면 북한의 경제성장은 보다 빠를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그동안 대부분의 남북한 통화통합 관련 연구에서 참고하고 있는 통화통합 사례는 동서독과 유로존 사례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가 남북한에 적용 또는 참고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본 논문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유사하면서도 경제적 성과가 양호한 사례를 선별해 보았다.

선별 결과 선 정치통합시에는 정치통합 이후 1국 2통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중국 사례가 더 적합하며, 후 정치통합시에는 경제력 격차가 크에도 불구하고 환율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CFA프랑존의 사례가 남북한에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한이 정치통합을 먼저 이룬다면 1국 2통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화통합을 점진·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중국처럼 수십 년 동안 다른 통화를 사용하면 통일한국의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별도의 통화 및 환율정책을 사용하여 각자의 경제상황에 맞는 정책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이 정치통일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하여 통화통합이 추진될 경우 북한의 체제전환 초기에 환율동맹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CFA프랑존 사례처럼 남북이 환율동맹을 이룰 경우 북한의 체제전환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가 체제전환에 성공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이후의 통화통합 방안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현상만을 근거로 적합성을 판단했다는 점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1국 2통화 체제를 사용하면서 두 통화 간의 환율제도와 향후의 통화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홍콩·중국의 사례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후 정치통합시 바람직한 사례로 분석된 프랑스-CFA프랑존 사례를 선 정치통합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韓國銀行 金融經濟研究院 東北亞經濟研究室 次長

100-79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번지

전화: (02)759-5480

팩스: (02)759-5400

E-mail: smmun@bok.or.kr

서울대학교 國際大學院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화: (02)880-8524

팩스: (02)889-8524

E-mail: mwoosik@snu.ac.kr

〈附表 1〉 南北韓 統一方案 變天(1948~現在)

연도	구분	남한		북한	
		1948~1960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 유엔 감시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김일성 정권
1960 년대	제2공화국 (장면 정부)	▲ 남북 자유 총선거론 (유엔 감시하)	"	▲ 남북연방제(1960)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 선 건설 후 통일론(1964)			
1970 년대	제4공화국 (")	▲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1973. 6. 23) ▲ 선 평화 후 통일론(1974)	"	▲ 고려연방제(1973) · 조국통일 5대 강령	
1980 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1982)	"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1980)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1990 년대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에 기초한 연방제(1991)	
	문민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1994)	김정일 정권 (1998~)	· 민족대단결론	
2000 년대	국민의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계승(1998)		▲ 낮은단계의 연방제(2000) · 민족공조론	
	참여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계승(2003)			
	이명박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계승(2008)			

資料: 통일부 통일교육원(2008, p. 82).

〈附表 2〉南北韓 統一方案 比較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남조선혁명, 연공합작, 통일 후 교류협력)
주체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철학	자유민주주의(인간중심)	주체사상(계급중심)
전제조건	無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철수
통일과정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3단계)  ※ 민족사회 건설우선 (민족통일 → 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제도통일은 후대에)  ※ 국가체제 존립우선 (국가통일 → 민족통일)
과도통일 체제	남북연합 -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헌장」을 채택, 남북연합 기구 구성·운영  ※ 남북합의로 통일헌법초안 마련 → 국민투표로 확정	無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국가의 기구	통일정부, 통일국회(양원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구체적 언급 없음

資料: 통일부 통일교육원(2008, p. 83).

## 參 考 文 獻

- 권구훈(1997): “각국의 통화통합사례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교훈,” 전홍택·이영섭 편,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한국개발연구원.
- 박영호·김학성·손기웅·이교덕·전현준(2002):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02-06, 통일연구원.
- 안예홍·문성민(2007):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 『금융경제연구』, **291**,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윤덕룡(1997): “개혁 과정에서 가능한 북한 화폐정책의 대안과 화폐통합,” 『통일문제연구』, **27**, 평화문제연구소.
- 윤덕룡·정형곤·남영숙(2002):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건범(2006): “재정 및 금융 분야의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비교경제연구』, **13, 1**, 57-99.
- 이영섭(2002): “유로의 도입과정과 남북한의 점진적 화폐통합: 통화경쟁 논의를 중심으로,” 『EU학연구』, **7, 1**, 125-155.
- 장봉규(2001): “남북한 통화통합의 과제,” 『경제학논집』, **10, 2**, 101-129.
- 장영석(2007): “홍콩-선전 관계의 변화: ‘전방 상점, 후방 공장’ 모델에서 ‘지역 통합’ 모델로의 전환,” 『중소연구』, **112**, 2006/2007 겨울.
- 장원태(1997): “남북한 화폐통합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9, 1**, 133-159.
- 전홍택·이영섭(2002):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 시나리오별 분석 -』, 연구 보고서 2002-04, 한국개발연구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2008): 『통일문제 이해』.
- 하성근(1997): “통화통합과 통화신용정책의 과제,”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한국개발연구원.
- Alesina, A., E. Spolaore, and R. Wacziarg(2000):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Disinteg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0, 5**, 1276-1296.
- Alesina, A., and R. J. Barro(2002): “Currency Union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2**, 409-436.
- Bayoumi, T., and B. Eichengreen(1997): “Ever Closer to Heaven? An Optimum-Currency-Area Index for European Countries,” *European Economic Review*, **41, 3-5**, 761-770.

- Brou, D., and M. Ruta(2007): “Economic Integration, Political Integration or Both?,” mimeo.
- Busch, U., and C. Müller(2004): “Despite or Because? — Some Lessons of German Unification for EU Enlargement,” Working Paper No. **04-87**, Swiss Institute for Business Cycle Research.
- Canova, F., and M. O. Ravn(2000):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German Unification: Real Adjustments and the Welfare Stat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3, 3**, 423-460.
- Cobham, D., and P. Robson(1994): “Monetary Integration in Africa: A Deliberately European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22, 3**, 285-99.
- Corden, M.(1972): “Monetary Integration,”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93, Princeton.
- Cukierman A., and F. Lippi(2001): “Labour Markets and Monetary Union: A Strategic Analysis,” *The Economic Journal*, **111**, 541-565.
- De Grauwe, P.(2005): *The Economics of Monetary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 Eichengreen, B.(1996): “On the Links between Monetary and Political Integration,” Working Paper **C96-077**,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 Issing, O.(2001): “Economic and Monetary Union in Europe: Political Priority versus Economic Integration?,” Conference 2001 of the Europ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 Kenen, P.(1969): “The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 An Eclectic View,” *Monetary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won, G.(1997): “Experiences with Monetary Integration and Lessons for Korean Unification,” Working Paper No. **97/65**, IMF.
- Martin, M. F.(2007): “Hong Kong: Ten Years after the Handover,” CRS Report for Congress.
- Masson, P. R., and C. Pattillo(2005): *The Monetary Geography of Afric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McKinnon, R.(1963):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717-725.
- Mundell, R.(1961): “A Theory of Optimal Currency Area,” *American Economic Review*, **51, 4**, 657-665.
- Nitsch, V.(2004): “Have a Break, Have a ... National Currency: When Do Monetary Unions Fall Apart?,”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1113**.
- Rogers, J. H.(2007): “Monetary Union, Price Level Convergence, and Inflation: How Close is Europe to the US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 785-796.
- Stasavage, D.(2003): “When Do States Abandon Monetary Discretion? Explaining the Persistence and Evolution of the CFA Franc Zone,” in Peter J. Katzenstein(ed.), *Monetary Orders: Ambiguous*

*Economics, Ubiquitous Politics*(*Cornell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Ramirez, G., and C. G. Tsangarides(2007): “Competitiveness in the CFA Franc Zone,” IMF Working Paper No. **07/212**.

Vaubel, R.(1978): *Strategies for Currency Unification*, Kieler Studien, No. **156**, Tübingen, Mohr & Siebeck.

Veyrune, R.(2007): “Fixed Exchange Rates and the Autonomy of Monetary Policy: The Franc Zone Case,” IMF Working Paper No. **07/34**.

Zhao, X., and Y. Kim(2006): “Is the CFA Franc Zone an Optimum Currency Area?,” mimeo.

